

전남의 30년 숙원 '국립 의대 설립'에 한걸음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미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합의는 18년 만에 시도 되는 국립대 간 통합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전남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설립에 한걸음 다가간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끊이지 않았던 지역 간 갈등·경쟁 구도와 소모성 논쟁을 마무리 짓고 열악한 의료 실태를 개선하고 동·서부권의 공동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지역민 목소리를 모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전남 국립 의대 신설로 답답함=전남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시화됐다. 목포대가 지난 1990년 의대 신설 건의문을 정부에 보낸 이후 전남이 30년 넘게 줄기차게 요구해온 숙원 사업임에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진보·보수 어느 정부에서도 현실화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전남도청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 "국립 의대(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윤 대통령의 '국립 의대 설립 대학을 정해달라'는 발언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나갔고 결국 목포·순천대가 '대학 통합 및 통합 의대 추진'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최근 출범해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여·야·정 협의체는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방침을 '의료개혁 논의 테이블'에 상정하고 '2026학년도 통합 의대 개교를 위한 정원 배정' 등 전남 의료복지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지역 정치권 반응이다.

정부 서열 1·2위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정책적 판단을 내려준 데 따라 후속 절차를 밟아온 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은 순천대 총장도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의과대학 신설 약속을 이행할 때"라며 "전남 도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대와 순천대 합의 내용·후속 절차는=목포대와 순천대는 합의서에 따라 향후 양 대학 동수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통합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통합 신청서'에 담긴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방침으로, 통합 대학 교명, 인재 양성 계획, 대학 본부와 운영 거버넌스 등 구성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전남도가 의견 수렴해오면 의대 신설" 약속

국립대 간 통합 캠퍼스별 특성화 통한 거점 대학 선도 모델



국립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 및 통합 의대 설립을 합의했다. 전남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설립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 뿐 아니라 18년 만에 시도되는 국립대 간 통합으로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한 거점국립대 선도모델을 만들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오른쪽)과 이병은 순천대 총장이 지난 15일 밤 통합에 합의한 뒤 합의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합의서는 특히 '양 대학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대학 명의로 '2026학년도 통합 의대 정원 배정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과 '통합 대학 신청 시 교육부가 정한 기한 내 의견을 갖추지 못한 대학교가 있을 경우 요건을 갖춘 대학교가 통합 의대 정원을 우선 배정받되, 통합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통합정신을 바탕으로 교육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교가 요건을 보완하면 즉시 통합대학으로 정원을 배분한다'고 명시, 의대 정원 배정에 총력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통합 의대 설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중복 학과·기능 조정이나 통합 방안은 장기적 과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글로벌30 대학으로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중인 만큼 통합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전남도는 "통합 대학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글로벌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대학 혁신사업을 지원해 지역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에서 취업까지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의 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현재 진행중인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를 보유하고 오는 29일까지 통합 의대 명의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2026학년도 통합 의대 개교'를 위한 정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동·서부권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재정 등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복지 확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대·순천대 통합 '견인차' 김영록 전남지사

'국립 의대' 신설 매개로 방향 제시 끝까지 인내하며 설득 통합 이끌어

박창환 부지사 투입 최적안 도출 전남도, 동·서부권 화합 기틀 다져

김영록 전남지사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성사시켰다. 만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봤던 양 국립대 총장의 합의서가 2개월여만에 작성된 것은 무엇보다 김 지사의 명확한 방향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약속을 실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의대 유치와 관련 갖가지 비판을 끝까지 참아내며 밀어붙인 냉철한 인내가 이를 뒷받침했다.

김 지사는 민선 7기때인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 의대 설립이 의료계의 반발 속에 무산되자 민선 8기 들어 의과대학 유치 TF를 구성하며 도정의 핵심 현안으로 상정했다. 도민의 건강·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를 대학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었다. 이후 지역 내 의견을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주력한 김 지사는 2023년 6월 목포대, 순천대와 '국립 의대 설립 공동 협력' 선언을 이끌어 냈다.

내부를 충분히 다졌다고 생각한 김 지사는 본격적으로 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강력 요청했으며, 의료 취약지역 경북과 연대해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의대유치추진단'을 신설하고 정책 및 전략 구상·실천 조직도 꾸렸다. 이어 올해 첫 해외출장으로 캐나다를 찾아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에서 두 대학 공동 설립 사례를 벤치마킹한 김 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의대 설립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김 지사의 노력에 '공동 단일 의대 추진'으로 화답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추진력은 지난 3월 14일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립 의대(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을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이끌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 목포대가 의대 신설 건의문을 정부에 보낸 이후 34년째 전남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숙원 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이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등의 대통령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발언이 뒤따랐다.

이제 문제는 "어느 대학에 국립 의대를 설립할 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였다. 양 대학에 의대·병원을 설치하는 '공동 단일의대'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고, '통합 의대'는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한 김 지사는 '공모를 통한 의대 설립 대학 선정'을 고민



끝에 선택했다.

하지만 순천대가 이에 반발하고 동부권 전체가 공모의 부작 질성을 부각시키면서 난관을 맞았다. 2026년 정원 배정을 위해 한 가운데 김 지사는 순천

대의 공모 참여를 설득하면서 한편으로는 최상의 방안인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설립'을 물밑에서 타진하고 있었다.

전남도가 지난 9월 초 '공모를 통한 1대학·2병원'과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의대 설립'을 두트랙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도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교육부가 '1도 1국립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할 경우 정부 정책을 분명히 따르면서 의대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도 잠재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추진 시기를 한 달여 늦춰 대학 통합 지원에 나선 것이 지난 9월 말이다. 이러한 김 지사의 판단은 10월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은 순천대 총장 등이 만난 자리에서 통합의 밑그림이 나올 수 있게 추동했다. 일부 인사는 이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통합에 확신을 얻은 김 지사는 목포대·순천대 합의문을 작성할 때까지 세부 논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기다렸다. 통합 합의문 기한을 11월 15일로 못 막았지만 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양 대학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 14일 오후 어느 정도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 김 지사는 외국 출장 중인 명확한 행정부지사 대신 박창환 경제부지사를 투입시켜 전남도의 의지를 보였다. 결국 15일 밤 11시 50여분간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은 순천대 총장이 마지막 기한을 지켜 통합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대학 통합을 통해 동·서부권 화합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너무도 기쁘다"며 "여러 갈등과 마찰 속에서도 양 대학의 통합을 이끌어준 양 대학 총장님과 대학 구성원들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치참여의 기회를 갖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치후원금



모두 함께
세상을 바꾸는
노련극

정치자금(기탁금, 후원금) 기부 연말정산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후원한도

- 중앙당 및 국회의원후원회: 각 500만원까지
- 시·도의회의원후원회: 각 200만원까지
-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각 100만원까지

*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정치후원금센터
바로가기
www.give.go.kr

